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시급”… 野, 특별법 단독 처리 시사

김민석 민주당 정책위의장 간담회
“여당, 논리적 수용에도 결론 지연
급하다 해서 추진… 기다릴 수 없어”

전세사기 특별법안 국회 협상 과정에서 특별법 적용대상과 보증금 보전 대책을 두고 여야 간 입장 차가 뚜렷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이 9일 “정부여당이 결정을 미루면 불가피하게 합의된 가장 합리적인 방안으로 피해자의 요구를 해결하기 위한 법안을 추진하는 것을 신중하게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민석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기자간담회에서 “전세사기 문제에 대해서 큰 틀에서 지난 여야 3당 정책위의장 협의 때까지만 해도, 여당에서 특별법 논의에 소극적인 것을 우리가 적극적으로 요청해서 논의에 들어갔다”면서 “상임위 논의사항을 확인해보면, 여당이 민주당의 요구를 회의적 상에서 논리적으로 수용했음에도 실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뉴스시

제로 결론을 내는 것은 지연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민주당은 정부가 제시한 피해자인정 기준을 완화하고 보증금 우선 변제를 통해 피해자를 지원하자는 입장이며, 사실상 법안의 단독 처리 가능성을 시사한 것으로 풀이된다. 여야는 10일 국토위 소위를 열고 전세사기 특별법을 논의한다.

김 정책위의장은 “법안을 단독으로 추진하는 것이냐”는 질문에 “야당 단독 안이라고 말씀 드린 것은 아니다. 현재까지 논의에 근접한 내용에 대해서 여당이 적극적인 태도를 안 보였기 때문이다. 특별법은 급하다고 해서 추진했다. 마냥 기다릴 수 없다. 최대 한도로 보장 하되, 시간도 늦출 수 없다”고 말했다.

이소영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원내대

책회의 후 기자들을 만나 “정부는 전세사기 피해자들에게 임대주택과 경매 주택 우선 매수권만 주는 대책만 주고 있다. 민주당은 이 둘 만으로 유의미한 구제책이 안 된다는 판단이다. 이 두 가지를 포함해 제3의 선택지를 가질 수 있도록 정부가 추가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요구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최우선 변제 제도를 개선해서 보증금을 일부 회수하는 방안, 보호 대상에서 빠진 강통 전세 주택 부분들에 대해서도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이야기 하고 있다”며 “정부의 진전된 입장이 나오길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지난 3일 열린 국회 국토법안심사소위에 참여한 허종식 민주당 의원은 회의 중간에 기자들과 만나 “강통 전세도 사기성이 인정되면 전세 피해로 보는데, 어떻게 사기로 볼 건지에 대한 규정이 모호하다. 미추홀구, 빌라왕 사례가 다르다”며 “상업용 빌라 사기 사건은 주택이 아니라 피해자가 아닐 수 있는

데, 그 부분까지 논의하자는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한민수 민주당 대변인은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세사기 피해자의 바램은 보증금을 돌려받는 것”이라며 정부여당의 자세 변화를 촉구했다.

한 대변인은 “지난 10여 일 동안 국토소위의 법안 심사과정에서 야당 의원은 물론이고 여당 의원조차도 정부의 구제 대책이 미진하다는 데 입장을 같이했다. 피해임차인들은 전 재산이거나 빚으로 마련한 전세보증금을 날릴 상태다. 그런 임차인들에게 ‘추가로 빚을 내 줄테니 그 집을 사라’는 정부여당의 주장은 남의 얘기일 뿐”이라며 “특별법 적용대상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내용은 즉각 수정돼야 한다. 피해자측 의견을 경청해서 피해보증금 보전대책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 스스로 보전대책을 내지 못한다면 야당의 보증금 보전대책을 수용하라”고 했다.

/박태홍 기자 pth7285@metroseoul.co.kr

與 “김재원·태영호 징계, 사실관계 추가 확인”

‘당원권 정지 1년’ 중징계 가능성 거론
일각선 내용 우려 자진사퇴 압박 풀이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가 김재원·태영호 최고위원에 대한 징계 수위 결정을 보류했다. 당이 위기 상황인 만큼 빠르게 결정할 것이라고 밝힌 윤리위는 지난 8일 ‘사실관계 추가 확인 필요’라는 이유로 결론을 내지 않았다. 이와 관련 ‘자진 사퇴’ 압박으로 내용을 피해 가려는 게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윤리위는 지난 8일 회의에서 김재원·태영호 최고위원으로부터 징계 안건 관련 소명을 들었다. 이후 추가 사실관계 확인 이후인 오는 10일 3차 회의에서 징계 수위를 결정하기로 했다.

당시 황정근 윤리위원장은 “각 최고위원 별로 세 가지 (추가 사실 확인이 필요한) 사유가 있다. 참고 서류, 관련자 진술서 등 여러 가지 방법으로 소명 자료를 첨부해야 한다는 주장이 있어,

그것을 뒷받침하는 소명 자료가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두 최고위원이 사퇴하면 ‘징계 수위’ 조정에 반영할 가능성도 내비쳤다.

사실상 소명 자료 제출부터 징계 수위 결정 시점인 이틀 동안 윤리위가 자진 사퇴 압박에 나선 것으로 풀이되는 대목이다.

황 위원장은 ‘최고위원직을 사퇴하면 양형에 반영하는가’라는 기자들 질문에 “만약 정치적 해법이 등장한다면 그에 따른 징계 수위는 여러분이 예상하는 바와 같을 것”이라고 했다.

9일 국민의힘 상황을 보면, 두 최고위원에 대한 ‘당원권 정지 1년’ 중징계 가능성이 거론된다. 문제는 ‘당원권 정지 1년’이란 중징계 시 두 최고위원의 내년 총선 출마가 어려워진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두 최고위원의 징계 수용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불복 시 법적 다툼으로까지 번져 내용이 커질 것이라는 우려도 있다.

앞서 두 최고위원은 자진 사퇴 가능

성을 일축한 바 있다.

태 최고위원은 9일 국회의원회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지도부나 당 관계자로부터 자진사퇴하라는) 여러 가지 소통은 지금 (문자까지) 수백 통 오고 있다. (하지만) 현 시점에서 추가로 드릴 말씀은 없다”며 자진 사퇴 가능성을 일축했다.

김 최고위원도 지난 8일 윤리위 소명을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자진 사퇴 가능성에 대한 질문에 “자진 사퇴 요구를 누구에게도 들어본 적이 없다. 지금 이 자리에서 처음 듣는 얘기”라고 했다.

한편 김기현 당 대표는 9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두 최고위원의 징계 가능성에 따른 지도부 공백 가능성이 나오는 데 대해 “지도부는 여전히 존재하고 있으니 공백이 아니다. 일부 결원이 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겠지만 그것이 어떻게 공백이냐”며 일축했다.

/최영훈 기자 choiyoungkr@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우리바다 지키기 검증 TF 임명장 수여식 및 1차 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뉴스시

국민의힘 ‘우리바다 지키기 검증 TF’ 출범 “국민 관점에서 日 오염수 방류 대안 마련”

밥상 안전확보 세미나 개최 예정

국민의힘이 일본 후쿠시마 원자력발전소 오염수 방류 문제 대응 차원에서 9일 ‘우리바다 지키기 검증 TF’를 띄웠다. 우리바다 지키기 검증 TF는 정부가 후쿠시마에 파견하는 시찰단에게 국민 안전과 관련한 세밀한 주문을 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수산물 밥상 안전 확보 차원에서 전문가·유관기관이 참여하는 세미나도 열기로 했다. 당 차원에서 출범시킨 우리바다 지키기 검증 TF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첫 회의를 갖고 이같이 정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우리바다 지키기 검증 TF 위원 임명장 수여식과 첫 회의를 열었다. 이 자리에서 TF 위원장으로 당 정책위의장을 지낸 성일종(재선, 충남 서산·태안) 의원이 임명됐다. 위원은 해양수산부·원자력안전위원회 소관 상임위원회 등 원내 인사와 김종덕 한국해양수산개발원장, 강건욱 서울대 방사선화학연구소장 등 해양·방사능 전문가 등이 참여한다.

첫 회의에서 윤재옥 원내대표는 이번 한일정상회담에서 대외적인 전문가 심사 합의뿐 아니라 추가적 검증까지 이뤄진 점을 언급한 뒤 “정부 대책을 국회가 꼼꼼히 점검, 부족한 점이 있으면 당

정 간 긴밀히 소통해 개선 방안을 마련해 국민 관점에서 조금도 불안이 없게 대안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박대출 당 정책위의장도 “국제원자력기구(IAEA)는 한국을 포함한 미국, 중국 등 11개국 전문가들로 모니터링 TF를 구성, 오염수 처리 과정을 검증하며 다음 달이면 최종 보고서가 나온다. 한일 정상이 공동 기자회견에서 한국 전문가단의 현장 검증 합의를 발표한 것은 국민적 우려를 과학으로 해소하겠다는 의지의 표명”이라고 했다.

1차 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난 성일종 위원장은 “중요한 것은 후쿠시마 오염수 처리에 대한 신뢰성 확보 문제”라며 “지금 채취하는 수산물에 방사능이 나온 적은 없지만, 국민 불안을 해소할 방안을 찾아보자는 이야기도 있었다”고 밝혔다. 이어 정부가 오는 23~24일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에 시찰단을 파견하는 것과 관련 “우리 국민 안전을 위해 조금 더 주물물 게 있으면 세밀하게 하도록 하는 게 좋겠다는 이야기도 있었다”고 밝혔다. 이어 “국민이 먹고 있는 수산물, 밥상 안전 확보 차원에서 TF가 앞으로 세미나 같은 것을 열어 전문가나 여러 유관기관도 참여해 함께 문제를 다뤄 국민을 안심시키도록 할 것”이라고 했다.

/최영훈 기자

유인태 “1, 2번 아니면 생존 불가… 중대선거구 개혁 필요”

〈前 국회 사무총장〉

국민공감서 정치 현황 관련 특강

야당 원로 정치인 유인태 전 국회 사무총장이 9일 “우리 사회가 다원화됐으니, 주요 정당은 100여석 남짓, 나머지 20~30석 정도 되는 정당 2개 정도로 다당제가 될 필요가 있지 않나”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올해 신년 인터뷰에서 언급한 중대선거구제 개혁 필요성을 재차 언급한 것이다.

유 전 사무총장은 이날 오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국민의힘 친윤(親 윤석열)계 공부모임 ‘국민공감’ 강연자로 나서 “한국 정치 이대로 괜찮은가”란 주



김기현 국민의힘 당 대표를 비롯한 지도부가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공부모임 ‘국민공감’에서 강연을 맡은 유인태 전 국회 사무총장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뉴스시

제의 특강을 하면서 “지금 우리가 기후 위기, 인구 절벽, 지방 소멸 등 해결할 문제가 있음에도, 심하게 말하면 지금

국회의원들은 재선 되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게 불행한 현실”이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다당제로 개혁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 당도 자꾸 누구를 찍어내려 하지 말고, 지금은 기호 1, 2번이 아니면 생존이 안 되는 생태계를 갖고 있으니 주도권을 잡으려고 1번 당에 모여 있는데, 서로 생각이 다른 사람들이 한 정당을 해도 생존할 수 있는 생태계를 만들어 주는 게 필요하지 않겠냐”고도 말했다.

한편 이번 특강에는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와 윤재옥 원내대표 등 여당 지도부도 참석했다.

/최영훈 기자